

## 상호저축은행법

### <목 차>

1.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수시심사제도 도입

##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수시심사제도 도입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홍상준						
	담당부서 (과)	중소금융과		직급	5급						
	국장	정완규		연락처	02-2100-2993						
	과장	신진창		이메일	hongguqaz@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근거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상호저축은행 (79개사)										
5. 규제존속기한	지속적 추진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現 2년 주기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한 수시심사제 도입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table><tr><td>법적 근거</td><td>법 규 명</td><td>소관부서</td></tr><tr><td>법</td><td>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td><td>금융위원회</td></tr></table>					법적 근거	법 규 명	소관부서	법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금융위원회
법적 근거	법 규 명	소관부서									
법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금융위원회									

##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現 2년 주기\*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한 수시심사제 도입

\*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저축은행 등은 1년 주기

- 심사 대상 및 심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의 구체화는 시행령위임

- 상호저축은행이 심사대상 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요건 미충족을 인지할 경우 보고의무 부여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u>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적격성심사 대상 대주주”라 한다)</u> ----- ----- ----- ----- ----- ----- 한 다.
<신 설>	④ 제3항과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u>적격성심사대상 대주주중 대통령령</u>

현행	개정안
<p data-bbox="215 654 383 694">&lt;신설&gt;</p> <p data-bbox="215 1128 486 1169">④·⑤ (생략)</p> <p data-bbox="215 1272 785 1648">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u>명할 수</u> 있다.</p> <p data-bbox="215 1675 438 1715">&lt;단서 신설&gt;</p>	<p data-bbox="853 241 1423 618"><u>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수시적격성심사대상 대주주”라 한다)가 저축은행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u></p> <p data-bbox="853 654 1423 1093">⑤ 상호저축은행은 수시적격성심사대상 대주주가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 data-bbox="853 1128 1423 1236">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p data-bbox="853 1272 1423 1648">⑧ -----제3항 또는 제4항----- ----- ----- ----- ----- -----</p> <p data-bbox="853 1675 1423 2051"><u>내용으로 하는 명령(이하 ‘요건충족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u> <u>다만, 해당 대주주가 6개월 이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u></p>

현 행	개 정 안
<p>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⑧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u>요건충족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u></p> <p>⑨ 금융위원회는 제8항 본문에 따른 요건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요건충족명령을 받지 아니한 대주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하 “주식처분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⑩ 제8항 본문에 따라 요건충족명령을 받거나 제9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⑪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승인, 승인신청, <u>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 및 명령</u>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 <u>주주 승인</u></p> <p>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대 <u>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u></p> <p>3. 제6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주 <u>식처분명령</u></p> <p>4. 제8항에 따른 <u>요건충족명령</u></p> <p>⑫ 제1항에서 제11항----- ----- <u>심사, 명령 및 자료제</u> <u>출이나 정보제공 요구</u>----- ----- --.</p>

## 1. 규제 필요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2년\* 단위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는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적기 대응에 다소 애로

\* 단,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동일계열은 1년(시행령 §7조의4⑦)

- 대주주와 상호저축은행간 부당거래에 따른 부실이 구조조정의 원인이 된 업권의 전례 존재

⇒ 대주주의 영향력이 큰 저축은행 업권 특성을 반영하여 부적격대주주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대응체계 마련 필요

###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지배구조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은 매우 큼.

- 대주주에 의한 저축은행의 부당한 의사결정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정부 개입이 필요.

- 또한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적격성심사로는 적시에 대주주의 부당행위를 적시에 규제할 수 없으므로,

- 대주주와 해당 저축은행 사이의 불법거래 징후 포착 등 필요한 경우에 수시적격성심사가 가능하도록하여 추가적으로 규제할 필요

###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대주주적격성수시심사제도 도입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되고 부실 경영 우려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됨.

## 2. 대안의 발굴·검토

### 가. 고려된 대안

#### < 현행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현행 법령을 적용할 경우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정기적격성심사만 가능하므로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움

####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행정지도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등을 통해 업계 자율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업계 자율로 운영시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될 우려

#### < 규제대안 1 :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수시심사제도 규정 신설 >

-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수시적격성심사대상 대주주)에 대하여,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상호저축은행이 심사대상 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요건 미충족을 인지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나. 대안의 분석

####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도입되는 규정의 특성상 네거티브 방식 적용이 어려움

####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동 개정은 민간의 자율·창의 등으로 대체가능한 사항은 아님

## < 해외사례 분석 >

- 유사 해외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 타법사례 분석 >

- 은행법의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 가능

\* 은행법 제1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 지배구조법의 경우 금융회사(은행,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등 제외)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과 금융회사와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 가능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6.8.1일 시행 예정)

## < 위임근거 검토 >

-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위임근거 없음

## < 이해관계자 협의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의('16.5.16)를 통해 저축은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음

##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현행 법령을 적용할 경우 대주주에 대한 정기적격성심사만 가능하므로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움

## < 결론 >

- 기존 규제 내지 비규제대안으로는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어 “규제대안1”을 선택